

기아차 노조 내일 쟁의 찬반투표

물류대란 고비 넘자 '연례파업' 닥치나

임단협 분류... '18년 연속 파업' 우려

시민들 "광주경제 핵심, 성숙 대처를"

24일 화물연대와 화주간 극적인 타협으로 한숨을 돌린 기아차 광주공장 이 2008년 임단협을 놓고 또다시 흰 겨운 줄다리기를 벌여야 한다.

박지 못하다. 이와 관련, 사측과 시민들은 "지난해까지 17년 연속파업으로 광주공장은 물론 광주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파업의 고리를 올해는 반드시 끊어내고 기아차가 광주 발전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8년 연속파업으로 가나=기아차 노동조합은 26일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프로젝트 XM) 북미공장 생산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협상만 진행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단체협상을 병행해야 하는데다 금속노조의 대각선 교섭,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겹쳐 어느 해보다 파업 가능성이 높다는 업계 안팎의 지적이다.

라보고 신중하고 사려깊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남긴 손실=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계속된 카케리어분회의 파업은 기아차 광주공장에 적지않은 생채기를 남겼다.



24일 과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운천 장관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제도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검역 지침 등에 관한 질의응답을 가진 후 기자회견장을 나가며 한 기자의 추가질문에 답하고 있다.

500명이 640,000곳 관리라니...

■ 원산지 표시·검역 '거미줄 규제'... 실효성 논란

동네식당들 반발... 한미분쟁 소지도

정부가 24일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에 앞서 원산지 표시와 검역을 강화하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검역 권한을 추가로 강화한데 이어 원산지 표시와 검역을 강화하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른다. 문제는 오는 9월 이후 사법경찰 등 4천800명의 투입된 특별단속이 끝나면 500명의 상시단속반이 64만곳이 넘는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박상표 국민건강주의사연대 정책실장은 "국내 한우에 대한 생산이력 추적제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해봤자 전이행정 에 그치고 국내산과 호주산, 미국산 젓소를 구분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산 소의 SRM 판정 세부 기준을 마련, SRM과 인접한 허·내장이 들어오면 수입건별 등으로 각 3개 상자의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모두 녹인 뒤 육안을 통한 관능검사와 함께 현미경을 통한 조직 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은 내장에 대한 조직 검사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실제 적용 과정에서 검역 마찰이 빚어질 수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에 의해 농도 차이를 있을 뿐 소장 전체에 분포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와 반찬까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정도의 거미줄 규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과 인접한 허와 내장(소장)의 조직검사방법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다.

정부는 100㎡ 이상 등 규모에 관계 없이 소규모(100㎡ 미만) 등 모든 식당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

록 했고 현행 법상 원산지 표시 적용 대상이 아닌 50인 미만 보육시설·학교의 집단 급식소도 관련 부처의 내부 규정에 반영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새로운 원산지 표시 제도는 한 마디로 '모든 식당·급식소의 모든 쇠고기 사용 음식은 원산지를 밝혀야한다'는 것이지만 단속의 현실적인 한계와 함께 소규모 식당의 반발이 우려된다.

더구나 원산지표시 대상 식품 범위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식육과 포장육 및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해 조리한 모든 음식'으로 확대돼 실효성 논란을 더 키웠다.현실적으로 소량의 쇠고기가 들어간 국이나 반찬 등까지 어떻게 일일이 원산지를 표시하고,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지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는 수는 약 64만3천여 곳에 이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대차노조 "앞장서 투쟁 않겠다"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가 7월 하투를 앞두고 잇따라 현대차지부만 앞장서는 투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를 믿고 힘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지부만 앞장서는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지난 17일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됐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를 불모로 한 투쟁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의 중요한 힘의 원천인 만큼 현대차지부를 앞장 세우는 투쟁이 아니라 15만명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싸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소식지에서 "현대차지부는 15만 금속노조와 함께 하나 되는 투쟁을 위해 모든 준비를 완료한 만큼 4만5천 조합원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난 20일 교섭팀 및 대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운해모 지부장은 '금속노조 15만 전체가 함께 하는 투쟁은 반드시 실천한다'.

정 위원장은 또 앞서 지난달 29일 현대차지부의 파업출정식에서도 "현대차만을 파업에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3차례에 걸쳐 "현대차지부만 앞장서는 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금속노조 위원장과 현대차지부장의 언급은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의 파업 방침이 결정된 상황에서 다른 완성차 회사가 파업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면 '현대차만의 파업'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정 위원장은 또 앞서 지난달 29일 현대차지부의 파업출정식에서도 "현대차만을 파업에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조는 "이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26일과 27일) 가결을 위해 현장을 조직하고 4만5천 현대차지부 조합원들은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 대의원, 현장조직위원을 믿고 함께 해야한다"며 "운지부장이 '15만 전체가 함께 하지 않고 현대차지부만 하는 투쟁은

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the Honda Legend. The top part features the text '달리는 것을 좋아하는 당신을 위해 새롭게 태어났다' (Born again for those who love driving). Below this is the slogan 'True Drivers Only New LEGEND'. The main image shows a silver Honda Legend sedan driving on a road. At the bottom right is the Honda logo.

'캐나다發 광우병' 국내로 불똥 튀나

미국산과 완전 별개 보기 힘들어

쇠고기 정국 부정적 영향 미칠 듯

두 달째 진행중인 '쇠고기 정국'에 부담스러운 소식이 하나 더해졌다.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이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에서 광우병(BSE)에 걸린 소가 발견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특히 캐나다는 지난 4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타결된 뒤 같은 조건으로 대(對)한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협상을 요청해온 상태여서 '쇠고기 파동'에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사료에도 포함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미국산 쇠고기와 캐나다산 쇠고기가 완전히 별개의 존재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광우병 소 3마리 가운데 1마리는 캐나다산이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미국은 2003년 12월 당시 발견된 최초의 광우병 소가 캐나다산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캐나다 소의 수입을 금지했으나 2005년 7월부터 시장을 재개했다. 미국이 2004년 12월 광우병과 관련, 캐나다를 '최소 위험지역'으로 판정된 결과다.

문제는 캐나다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이뤄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통제국' 지위 판정을 무기로 한국에 자국산 쇠고기 수출을 재개하려는 의사를 강하게 갖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광우병 발병을 계기로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했으나 캐나다측은 수입 재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